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와 낮은 재정 자립도 등 구조적 한계는 이미 개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중앙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다.

그러나 통합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행정통합은 시작일 뿐, 진짜 파제는 그 이후에 있다.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행정조직이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인사, 조직, 예산, 청사 입지, 산업 배치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

시도통합의 성패는 리더십

전, 서울특별시급 권한을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의 견제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며, 이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과제는 만만치 않다.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생활권이면서도 오랜 기간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경쟁과 균형이 존재한다. 통합 이후에는 “어디에 더 투자하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지역주의가 결합될 경우 통합은 오히려 분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때문에 통합시장에게는 5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먼저 ‘돌파형 실행력’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난함’이 아니다.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실행력이 필수다.

또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정책을 관철시키는 능력이다.

예산, 권한, 기관 이전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구조 설계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조원은 기회이자 시험이다. 이 자금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투자해야 한다. 반도체, 에너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 ‘통합 리더십’도 갖춰야 할 덕목이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비전을 바탕으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능력’이다. 통합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내 삶이 좋아졌는가”로 평가한다. 교통, 의료, 일자리, 소득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은 분명 역사적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저절로 성과가 되지 않는다. 중앙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고, 내부는 쉽게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는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결국 리더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리자가 아니라 설계자이며, 조정자가 아니라 돌파자이며, 정치꾼이 아니라 실행가다.

중앙의 벽을 넘고, 내부 갈등을 통합하며, 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때 비로소 통합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누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것인가. 누가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

광주·전남의 미래는 결국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고

이달승

전남소방본부 화재대응과장



불철은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맞물리며 들불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다.

논·밭두렁 정리,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일상 속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되거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남도소방본부는 매년 불철 들불화재 중점 관리를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안전실천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통계는 들불화재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도에서 발생한 들불화재는 총 1120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4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와 6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전남 전체 화재 발생 현황에서도 들불화재는 최근 5년 평균 연 224건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육 주목해야 할 점은 화재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전남 들불화재 1120건 중 1098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들불화재가 예측할 수 없는

잿빛 상처, ‘들불’은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임을 의미하며,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화재의 98%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꽂초 투기, 용접 작업 중 불티 비산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곧 대형재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 들불은 초기에 작아 보여도 건조한 기상과 강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확산된다.

특히 전남은 산림과 농경지, 마을이 인접한 지역이 많아 들불화재가 산불로 확대되거나 주택,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 생활공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번진 불길은 막대한 소방력 동원은 물론 주민 대피와 지역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전국 들불화재는 425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20명, 부상 129명의 인명피해와 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주요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들불화재 예방의 핵심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4월 화순에서 80대가 양봉훈연기 사용 부주의로, 올해 3월 나주에서 70대가 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해 사망했다.

이처럼 들불화재는 단순한 야외 소각 사고가 아니

라, 언제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재이다.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는 첫째,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은 절대 삼가야 한다. 둘째, 입산이나 영농 작업 시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를 멈춰야 한다. 넷째,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혼자 진화하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소방은 언제나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들불화재의 경우 현장대응도 예방이 훨씬 중요한 이유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몇 분 사이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들불화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소방력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울분에는 “이 정도는 관할겠지”라는 방심 대신,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책임이다.

전남도소방본부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들불 없는 안전한 봄을 만드는 데 전남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

독자투고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 안전이 최우선

최근 해빙기와 봄 행락철이 겹치면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가 잇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가 커진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해진다. 고속 주행 중 화물차 타이어가 이탈해 반대편 차로를 덮치는가 하면, 코일 형태의 와이어가 도로 위로 낙하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 같은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노후화와 적재 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시설 개선과 보안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과 휴게소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은 단속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와 단속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드는 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매 순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서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임승환 고속도로순찰대 제5구대 4팀장

사설

혼탁·과열 통합시장 경선이 걱정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요동을 치고 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치러지는 본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8명에 달하던 후보들이 자진 사퇴, 예비 경선 탈락, 단일화 등으로 하나둘씩 사라져 이제 4파전이 됐다.

이제 본선에는 기호순으로 신정훈, 민형배, 주철현, 김영록 후보가 남아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여론조사로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해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형배·김영록 후보가 20%대 중반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강기정·신정훈·주철현 후보가 10%대로 뒤를 쫓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단일화로 신 후보의 약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단일화로 본경선이 2강 구도에서 ‘3강 구도’가 됐다든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선 후보들의 합종 연횡도 가속화되고 있다.

김 후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한 이병환 후보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과 ‘원팀’을 구성했다.

민 후보도 주 후보와 함께 산업·국립의대·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현안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 연대를 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본 경선이 들어가기 전 단일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 통합시장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경선이 후보자들의 쟁점 등에 의해 과열·혼탁으로 전개되면서 경선후 극심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선 직후 허위 득표율 문자 짜러사기 돌고 카드뉴스 조작 논란이 일더니, 이번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논란까지 일어 후보 간 고발 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누가 되든 본선 승리를 자신해 ‘큰 흡집’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 후보들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7월이면 40년 만에 분리된 광주·전남이 하나 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출범 초 주창사 소재지 문제, 첨단산업·에너지·AI 등 성장동력 확보 등 할 일이 많은데 지역은 이번 경선에서 갈라질대로 갈라져 있다. 지역이 하나로 뭉쳐도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벅단테 말이다. 경선 이후가 걱정된다.

중동 리스크 현실화··단기·중장기 전략 절실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했다. 수출 위주의 광주·전남경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휘청이고 있다.

‘중동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소재 수출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이란 사태 관련 수출업체 애로 조사’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59.0% (매우 큰 영향 25.2%, 다소 영향 있음 33.8%)가 미·이란 사태로 직·간접적인 수출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기계·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13.5%), 첨단·에너지(10.1%), 생활·유아용품(7.9%), 가전(4.5%), 서비스·콘텐츠(2.2%) 순이었다. 물류와 원자재 변수에 취약한 제조업 중심 구조의 지역 산업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것이다.

기업들이 겪는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해상 운임 상승(25.4%)과 수출 물류 지연(20.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13.7%)과 바이어 주문 감소(11.7%)도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납기 지연과 물류 불안으로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지고 주문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운송 지연으로 재고가 쌓이고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 2차 피해도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중동 리스크’가 현재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 사업 구조 전반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지원은 물류비 보전이었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48.2%)가 이를 꼽았고, 이어 선복 확보 및 항로 다변화(18.9%), 수출 금융 지원(12.6%)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중동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지역 기업들은 현재도 자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더 지속될 경우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단기책과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 등 중장기 전략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수첩

정의는 법 안에서···신상털기 멈춰야



임영진 사회부 차장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만큼이나 충격을 준 것은 이른바 ‘신상털기’였다.

끔찍한 흉검 영상과 의료진 소견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분노가 커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급속히 확산됐다. 가족관계와 과거 사인, SNS 기록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뒤섞이면서 사실 여부보다 속도가 앞섰다. 그 과정에서 검증의 기준은 흐려지고, 여론은 더욱 격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강력 사건 때마다 반복된다. 공분은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얻고,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제재는 빠른 대신 검증이 부족하며, 한 번 퍼진 정보는 회수하기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유죄 확정 전까지 무

죄로 추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신상 공개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개인이 추가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주소나 가족, 과거 온라인 활동까지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제3자의 피해다. 과거 잘못된 정보로 특정 인물이 범죄자로 지목되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주변 인물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 역시 위험하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책임이 판단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은 감정과 속도에 의해 움직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문제를 드러냈다.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정의의 대신한다는 명분과 달리, 그 결과는 통제되지 않는다.

사적 제재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정의는 법과 절차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분노가 클수록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따라서 신상털기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멈춰야 하며, 사회적 경계 또한 필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